

이덕일의 '역사의 창'



누구를 찍어야 하나

몇 년 전 야스쿠니 신사(靖國神社)를 찾아가 본 적이 있다. 도쿄 지요다구의 일왕이 사는 왕거(王居) 북쪽에 총면적 93,356㎡, 약 3만1천 평의 거대한 신사다. 땅값 비싼 도쿄에 이런 신사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경이로운 일이었다. 야스쿠니 신사는 '전쟁 신사'(war shrine)라고 부르는 것처럼 전쟁과 깊은 연관이 있다.

1854년 일본의 도쿠가와 막부(德川幕府)가 미국의 페리제독에 의해 개항하자 반막부 세력이 일왕에게 정치를 물린다는 이른바 대정봉환(大政奉還)을 명분으로 군사를 일으켜 막부와 충돌하는 무진전쟁(戊辰戰爭:1868-1869)이 일어났다. 반막부파가 승리한 후 일왕 메이지(明治)가 자신을 위해 싸우다가 죽은 자들을 추모하는 신사 건립을 명령해서 1869년 '도쿄 소관쿠니'(東京招魂社)가 세워졌다. 10년 후 메이지가 '야스쿠니'(靖國)라는 이름을 하사했는데, 어지러운 나라를 편안하게 만들었다는 뜻이다.

야스쿠니 신사가 국제적 문젯거리로 떠오른 것은 2차 세계대전 A급 전범들을 합사했기 때문이다. 미국이 주도했던 동경국제재판은 731부대 책임자들도 처벌하지 않았던 송방망이 재판으로서 불과 7명만 교수형에 처해졌다. 진주만 습격의 책임자이자 수상인 도조 히데키(東條英機), 만주 및 중국 침략을 주도한 이타가키 세이시로(板垣征四郎)와 도이하라 겐지(土肥原賢二)

二) 두 육군대장, 영국령 공격을 주도한 버마방면군 사령관 키무라 헤이타로(木村兵太郎) 육군대장, 필리핀 민간인 학살과 포로 학대 혐의를 받은 14방면군 참모장 무토 아키라(武藤章) 등이었다. 중지나방면군(中支那方面軍) 사령관 마쓰이(松井石根)는 남경학살 혐의였고, 히로다 코기(廣田弘毅)는 나치 독일과 방공(防空)협정을 체결하고 중일전쟁을 미리 알고 지지한 혐의로 교수형을 선고받았다.

미국은 1948년 12월 23일 이들을 교수형시키고 유골을 도쿄만에 뿌렸는데,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 옥사한 코이소 쿠니아키(小磯國昭)의 변호인 산모지(三文字正平)가 유골 일부를 몰래 흥선사(興禪寺)로 빼돌렸다. 7명의 전범들의 유골은 옥사한 7인의 유골과 합쳐져서 야스쿠니에 합사되면서 야스쿠니가 전범 신사가 된 것이다. 필자가 야스쿠니 신사를 방문했던 어느 저녁에는 군복을 입은 백발노인이 일장기를 받들고 행군하고 손자인 듯한 아이가 뒤따르고 있었다. 한데 한동안 이 기괴한 장면이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 일본은 남의 나라를 침략하다가 사형당한 전범들에 대해 수상부터 국회의원들까지 추모가 그치지 않는 나라이다.

이들에게 빼앗긴 나라를 되찾으려다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들의 위패를 모신 곳이 우리의 '순국선열추모관'인데, 이런 추모관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아는

이 나라 정치인은 몇 퍼센트나 될까? 서대문 독립공원 한 귀퉁이에 '순국선열 현충사'라는 간판을 달고 있는데, 179,45㎡로서 약 54명에 불과하다. 순국선열들은 최소 15만여 명으로 추산하는데, 그중 신원이 확인된 2385위의 위패를 모셨다. 그나마 최근 신원이 확인된 480위는 위패 하나 모실 공간이 없어서 대기 중이다.

옛그제 3·1절을 맞아 윤봉길·이봉창·백정기 3의사 및 백범 김구 주석 등의 무덤이 있는 서울 효창공원 내 의열사에서 '3·1 혁명의 함성 되살려 반민족, 매국의 역사학 끝장내자'는 연합 행사가 열렸다. 이동일 순국선열유족회장은 순국선열 후손들이 처해 있는 참담한 현실이 조선총독부 역사관을 바로잡기 위해서 애쓰는 역사학자나 역사운동가들이 처해 있는 현실과 다르지 않다는 동질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순국선열유족회에 지원되는 국가 예산이 단 한 푼도 없다는 현실에 직면하면 대한민국에 정부는 과연 존재하는지, 왜 존재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박빙으로 전개되는 대선에서 누구를 뽑을지 고민하는 친지들을 만나기는 별로 어렵지 않다. 그때 나서는 말한다. 이 나라 역사학계를 지배하고 있는 식민사학을 확실히 해체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후보를 뽑으라고. 말이 아닌 행동으로 순국선열들의 뜻을 받들겠다는 후보를 뽑으라고. 그런 후보가 있다면 말이다.

〈순천향대학교 대학원 초빙교수〉

의료칼럼

임플란트를 이용한 틀니



허유리  
조선대학교병원 치과보철과 교수

오복(五福) 중의 하나라는 치아는 우리 삶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씹는 즐거움을 느끼게 해주고 대인관계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 있어서도 중요하다. 이가 없다면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기도 웃기도 꺼려질 것이다.

예전에는 이가 없는 경우는 치료에 한계가 있었다. 중간 이가 한두 개 빠지면 양측 치아를 깎아서 연결하는 브리지 치료를, 다수의 치아가 빠지면 틀니 치료를 하였다.

현재는 임플란트가 개발되고 널리 사용되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치료의 옵션이 다양해졌다. 양측 치아를 깎는 대신, 상실된 부위에만 임플란트를 심기도 하고, 다수의 임플란트를 심기 어려운 경우에는 몇 개만 선택적으로 심어서 틀니를 걸게 하여 틀니가 잘 안

빠지게 할 수도 있다.

치아가 하나도 없는 경우에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치료는 틀니다. 이를 전체 틀니, 다른 말로 '총의치'라고 한다. 전체 틀니의 경우에 남아있는 치아가 없기 때문에 잇몸을 최대한 덮어서 유지력을 얻는다.

하지만 잇몸 뼈가 많이 흡수되어 평평해진 경우에는 이 유지력을 얻기가 어렵고, 특히 아래턱 같은 경우에는 허로 인해 틀니의 움직임이 많아 잘 빠진다. 이런 경우에 임플란트를 식립한다. 통상적으로 위턱은 네 개, 아래턱은 두 개의 임플란트를 양측에 나눠 심고 임플란트에 자석이나 똑딱이 단추 같은 형태를 달아 주고, 틀니 안쪽에 자석·똑딱이 단추를 달아서 이 두 개가 붙어서 유지력을 얻게 도와주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기존의 전체 틀니보다 더 좋은 유지력을 얻어 틀니를 사용하기가 더 편하게 된다. 이 경우에 틀니 형태는 임플란트가 없는 전체 틀니와 같고, 틀니 내면에만 자석 등이 붙어 있게 된다. 하지만 자석이나 단추는 환자가 뺄 수 있는 힘 정도의 유지력을 갖기 때문에, 음식을 씹을 때 큰 힘이 가해지거나 한쪽으로 누르게 되면 반대 측은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를 보완하려면, 한쪽 턱에 4-6개 이상의 임플란트를

추가적으로 더 심어서, 임플란트를 연결해 치아를 만들고, 치아에 고리를 거는 부분 틀니를 만들어 줄 수 있다.

부분 틀니는 치아가 남아 있고, 남아 있는 치아에 고리를 걸어서 유지력을 얻는 틀니를 말한다. 아무래도 치아가 있게 되면 잇몸에서만 유지력을 얻는 것보다 더 좋은 유지력과 안정감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4-6개 이상 심고 치아를 만들어 부분 틀니를 만든다면 더 좋은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것은 개개인의 잇몸 뼈의 상실 정도나 위턱, 아래턱의 돌출 관계 등에 따라 식립 여부가 결정된다. 이 중 상실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식립이 어려울 수도 있으니 전문의의 정확한 사전 진단이 필요하다.

임플란트를 이용한 틀니도 기본적으로 본인이 넣었다 뺐다 하는 틀니이기 때문에 입속에 고정되어 있는 자연치나 보철보다는 사용하기가 어려운 것이 당연하다. 잇몸뼈는 계속 흡수가 일어나고 변하기 때문에 이 변화에 맞춰서 틀니도 조정을 해 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임플란트에만 유해한 힘이 계속 가해져 임플란트의 수명이 짧아진다.

어떤 치료도 정기 검진이 필요하다. 주기적인 검진과 처치가 임플란트와 틀니의 수명을 증가시킬 수 있다.

기고

취약계층에 더 큰 상처 안긴 코로나



김만수  
광주복지연구원장

코로나19가 범지구적으로 확산하면서 세계 각국은 뼈를 깎는 노력을 펼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정부의 선제적 대응과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으로 팬데믹(Pandemic)에 대응하고 있다. 덕분에 우리의 방역 체계는 세계적 모범이 되고 있다. 그러나 대응 과정에서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었고, 코로나19가 취약계층에게 더 큰 시련을 가져왔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은 광주복지연구원이 최근 광주시민 1070명을 대상으로 복지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실로 확인됐다. 광주복지연구원은 코로나 이전인 2017년과 코로나가 한창인 2021년을 생활 수준과 생활 및 인식, 인간관계 등 3개 분야로 나눠 시민들의 변화를 비교해 보았다. 조사 결과 코로나19 이후 지역 복지 수준은 전반적으로 하락했다. 특히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복지 수준이 심각하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한 생활 수준 변화에 대해 응답자의 40.1%가 악화했다고 평가하였고, 특히 저소득층, 임시 일용직, 자영업자 및 비경제 활동 인구 등 고용이 불

안정한 가구와 청년 가구의 생활 수준 악화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적 관계는 어떻게?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어느 정도 예견된 부분이지 하지만 이웃과의 관계, 자녀 돌봄, 경제적·정서적 지지 등 사회적 관계망의 전반적 악화가 실증 자료로 확인되었다.

특히 루벤(Lubben)의 사회관계망 도구를 이용해 평가한 사회적 고립 상태가 코로나19 이전인 2017년 19.0%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된 2021년에는 35.8%로 16.8%포인트나 증가한 점은 단순히 사회적 거리 두기의 영향으로 치부하기에는 설명이 부족하다.

이처럼 코로나19 이전보다 코로나19 이후 지역사회 참여율 하락뿐만 아니라 향후 지역사회 참여 의향도 눈에 띄게 하락한 점은 코로나19가 중식되더라도 약화된 사회적 관계가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사회적 관계 악화가 저소득층, 고령 불안정 가구, 1인 가구 및 중장년층에서 두드러진다는 점이다. 코로나19 전후 정신건강 상태를 비교해 보자면, 스트레스와 우울감 수준이 유의하게 상승한 점이 확인되었다. 특히 저소득층, 여성, 1인 가구의 정신건강 수준에 우려가 제기되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비대면 활동이 강제되는 상황에서 정보통신기술 활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인지도 및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돼 시민들이 비대면 활동에 적응한 면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 1인 가구 및 노

인 가구는 정보통신기술 활용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드러나 정보통신기술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

특히 복지 서비스의 온라인 전달체계인 '복지로' '보조금24' 등에 대해 광주시민 72.0%가 관련 홈페이지를 전혀 모르거나 알고 있더라도 활용한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는 코로나19와 같은 새로운 전염병 발생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보고 있다.

팬데믹 상황이 3년째 접어든 지금, 코로나19의 진행 상황은 어떻게. 많은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단기간에 종식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 나아가 다수의 공신력 있는 보고서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인간과 동물의 잦은 접촉은 코로나19와 같은 새로운 전염병 발생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번 복지 실태조사에서 진단한 바와 같이 팬데믹 상황에서 더욱 취약한 계층과 분야에 시의적절한 정책적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기후변화로 인한 새로운 전염병 발생 등에 대응한 장기적 전략도 마련해야 한다.

이에 따라 광주복지연구원은 올해 '사회재난 및 기후변화 적응에 따른 사회안전망 구축 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기로 했다. 새로운 재난 상황에서 복지 취약계층에 필요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이 취약계층에 더 큰 상처를 남긴 것이 확인된 만큼 우리 모두 사회안전망 구축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일 때다.

社說

내일부터 이틀간 사전 투표 누구 손 들어줄까

제20대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대선 사전 투표가 내일과 모레 이틀간 실시된다. 사전 투표는 미리 투표하고 싶거나 선거 당일 투표하기 어려운 유권자들이 주변 투표소 어느 곳에서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전국 3552곳에 투표소가 마련됐으며, 별도의 신고 없이 신분증만 가지고 가면 된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이번 대선은 양강 구도를 형성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막판까지 초박빙 접전을 펼치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 각 후보 진영에서는 지지자들에게 음성·문자 메시지를 통해 사전 투표를 독려하는 등 총력전을 펴고 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투표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는데다 사전 투표가 대선 당일 진행되는 투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광주·전남에서도 사전 투표에 대한 표심 잡기 경쟁이 치열하다. 지난 19대 대선에서 광주의 사전 투표율은 33.67%로 전남은 34.04%로, 전국 평균(26.06%)보다 높았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번 대

선의 광주·전남 사전투표율 목표율을 40% 이상으로 잡고 표심의 결집과 전략적 선택을 기대하고 있다. 국민의힘도 윤 후보에 호감을 보이고 있는 20-30대 유권자들을 사전 투표에 적극 참여시켜 호남에서 변화의 바람을 이끌어 낸다는 전략이다.

사전 투표는 투표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다. 여기에 코로나 확산 상황에서 유권자 분산으로 자연스럽게 물리적 거리 두기를 가능하게 해 주기 때문에 방역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이점도 있다. 따라서 감염을 우려해 투표장에 가는 것을 꺼리는 유권자가 있다면 사전 투표를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이번 대선은 역대 최악의 비효율 선거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이 때문에 소중한 주권자의 권리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특히 가능한 한 많은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해야 정확한 민의가 드러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유권자 모두 나의 한 표가 나 삼은 물론 나라의 미래를 바꾼다는 자세로 사전 투표에 적극 임해야 할 것이다.

문연 한국에너지공대 에너지 강국 디딤돌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가 역사적인 첫발을 내디뎠다. 어제 나주시 빛가람동 캠퍼스에서 열린 '제1회 신입생 입학식 및 비전 선포식'에는 신입생 학부 108명과 대학원생 49명을 비롯해 교직원과 귀빈들이 참석해 개교를 축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영상 축사에서 "한국 에너지공대는 국가 균형 발전의 새로운 활력이자 글로벌 에너지 허브 도약의 심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계 유일의 에너지 특화 연구·창업 대학을 지향하는 한국에너지공대가 문을 열기까지는 5년여의 시간이 필요했다.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의 공약으로 확정된 이후 입지 선정과 특별법 제정 등 숏한 관문을 넘어섰다.

앞으로도 갈 길은 멀다. 청운의 꿈을 안고 입학한 신입생들이 당분간 4총짜리 본

관 건물 한 동에서 수업을 받아야 할 형편이어서 우선 캠퍼스 건물 확보가 시급하다. 우수 교수진 확보도 과제다. 무엇보다 안정적인 대학 운영을 뒷받침할 재원 마련도 절실하다. 그동안 한전 및 전력 그룹사가 투자금을 부담했지만 개교 이후에는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분담하게 된다. 오는 2031년까지 대학 시설 투자비와 운영비로는 1조 6000억 원가량이 필요하다.

윤의준 총장은 이날 개교식에서 "한국 에너지공대를 2050년까지 에너지 분야 세계 10위 공과대학으로 성장시키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석유 한 방울 나오지 않는 한국이 미래에 에너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에 버금가는 첨단 기술과 개발 역량을 갖춰야 하며 여기에 한국에너지공대가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본다.

無等鼓

질서가 없이 어지러운 곳이나 그러한 상태를 아사리판이라고 부른다. 어원에 대해서는 대체로 세 가지가 있으며, 이판사판처럼 불교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유력하다. 산스크리트어에서 덕망이 높은 스님을 '아사리'(acarya)라고 하는데, 이들이 모여있으면 자기 의견만을 앞세우며 논쟁을 벌이는 모습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대선 후보들이 너도나도 아파트 대규모 공급을 공약으로 내놔 걱정이 앞선다. 이미 도시 공간은 충분히 '아사리판'인데도 과거 무분별한 규제 완

사라진 무등산

대시 반복될 것 같기 때 문이다. 곳곳에서 들러선 매력없는 고층 아파트들이 이제 한국 도시의 특징이 되다시피 했는데도 말이다. 건설업체, 부동산업체, 투기꾼들만을 위한 부동산 정책은 18세기 산업혁명 이후 20세기 초까지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 주요 국가 도시들의 모습과 닮아 있다. 저질 주택, 고층 아파트 단지 등이 도심과 교외에 지어졌는데, 당연히 투기와 난개발이 잇따랐다. 통풍·일조·교통·안전 등에서 매우 열악한 고층 주거단지로 인해 유럽 고유의 도시 경관이 급변하자 도

시·건축 전문가, 사회개혁가 등을 중심으로 도시계획운동이 들끓처럼 확산됐다.

이 운동의 핵심은 공원·광장·놀이마도 등 공공 공간 확보, 건축높이 규제, 서민 주택 공급, 역사·문화자원 보존 등이었다. 각 국가·도시마다 도시계획을 도입한 시기, 내용, 운용 방식 등은 조금씩 달랐지만, 주변 모습과 조화되지 않는 고층 건축물을 짓는 행위를 금지시켰고, 개발 수익은 철저히 환수하려 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로 인해 유럽 도시들은 그나마 가

지고 있던 경관과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경관계획, 디자인계획 등에 수십억 원의 혈세를 쓰고 있는 광주에서 어느 순간 무등산을 보기 어려워졌다. 사실 광주에 살면서 언제 어디에서나 무등산을 볼 수 있다는 것은 큰 기쁨이었다. 무등산을 광주에서 사라지게 한 이 계획들은 도대체 누구를,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 철저한 반성과 대책이 시급하다. 도시계획 운동의 근원에서 다시 광주의 도시공간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아야 한다.

/윤현성 정치부 부장 chadol@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b>金汝松</b> 주필 <b>李洪載</b> 편집국장 <b>崔宰豪</b>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 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